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7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4.

발 의 자 : 김용판 · 박덕흠 · 이인선
백종헌 · 권성동 · 이주환
류성걸 · 金炳旭 · 박대수
정우택 · 배준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,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앞으로는 기후변화 ·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,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,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이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 등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<u>②</u> · <u>③</u> (생략)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